

제423회 국회  
(임시회)

##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3월11일(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8)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8)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5.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7)
6.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4)
7.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3)
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69)
9.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김건 의원 등 108인 발의)(의안번호 2207927)
10.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김병주 의원 등 82인 발의)(의안번호 2207678)
11.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6)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2)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3)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
1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
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
1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8) .....	3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8) .....	3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	3
5.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7) .....	3
6.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4) .....	3
7.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3) .....	3
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69) .....	3
9.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김건 의원 등 108인 발의)(의안번호 2207927) .....	3
10.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김병주 의원 등 82인 발의)(의안번호 2207678) .....	3
11.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 .....	3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6) .....	3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2) .....	3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3) .....	4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1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 .....	4
1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 .....	4
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 .....	4
1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20. 현안질의 .....	10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자로 유용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이 되셨다는 것을 지난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유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

늘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안녕하세요. 유용원입니다.

원래 지난번 회의 때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해외출장 관계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동안 국방 분야에서 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외교통일 분야에는 문외한입니다. 앞으로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3월 21일로 예정된 2025년 APEC 정상회의 관련해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경주 현장 방문 그 일정안을 각 위원님 자리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경주 현장에서 준비 상황을 보고를 받으시고 정상회의장, 숙박시설, 만찬장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니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및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께서 오늘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명단 및 상세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먼저 의결을 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8)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8)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5.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7)
6.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4)
7.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3)
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69)
9.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김건 의원 등 108인 발의)(의안번호 2207927)
10.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김병주 의원 등 82인 발의)(의안번호 2207678)
11.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6)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82)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03)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

**1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

**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

**1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04분)

○**위원장 김석기** 의사일정 제1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건** 법안심사소위원회 김건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소위원회를 열어 외교부 소관 18건의 법률안과 4건의 동의안, 7건의 결의안, 통일부 소관 33건의 법률안, 재외동포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외교부 소관 3건의 법률안, 4건의 동의안, 2건의 결의안, 통일부 소관의 3건의 법률안 및 재외동포청 소관의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기존 협정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상호합의 절차의 신청국가를 양 체약국으로 확대하고 양국의 정보교환 협조 의무를 강화하며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 보호 및 납세자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바레인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바레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안도라공국의 과세권 경합을 조정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약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양국 국민과 기업의 이중적인 조세 부담을 방지하여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채집 및 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이익 공유를 의무화하고 구역기반관리수단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규정하며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선진국이 해양기술 이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양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2건은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결의하고 둘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신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 간 모든 분야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셋째, 한미 양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고 넷째, 한미 양국 번영의 교량 역할을 해 온 재미 한인동포 사회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권철승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모든 인권 취약계층 인권 향상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하고 둘째,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하며 셋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친권자의 소재불명, 수감 등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 박충권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하고 둘째,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과 효율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셋째, 탈북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기현 의원, 이용선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외동포 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정착지원 정책을 추가하고 재외동포 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과 자체 평가 결과의 제출 방식을 동일하게 하며 둘째,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사업을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셋째, 재외동포 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혹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재정 위원 의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정 위원 심사된 내용과 관련해서, 결의안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려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기 결의안은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이재정 위원 결의안은 제외한 건가요, 그러면 법안만?

○위원장 김석기 지금 심사보고 결과 말씀드린 중에서……

○이재정 위원 그러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해서는……

○김영배 위원 결의안 포함해서 설명하신 거잖아요.

○김건 위원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이재정 위원님 하십시오.

○이재정 위원 소위에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 또 그렇게 합의한 문구라는 점에서, 저도 법안소위 위원장도 해 본 입장에서 다른 방식의 이의 제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회의록에는 남길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내용 그다음 부분 4번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이 부분 비핵화 문제를 실시하는 방식은 맞지만 통상 국회 결의안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궁극적 목표의 단어로서 거의 고유명사화 된 단어만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북한의 비핵화를 넣은 결의안으로서는 최초의 결의안이 될 것 같아서……

단어가 가지는 힘이라는 게 있고 이것에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할지라도 또 어떻게 해석될 건지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다면 이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제가 윤석열 정부의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문제인 정부하에서는 한미 공히 공유한 문서에서 미국 측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를 통

해서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단시한적인 표현이 아닌가. 큰 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그 단어를 신중히 선택했던 기왕의 노력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발언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하신 뒤고 지금의 전체회의 과정에서 다른 논의가 불가능하다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때 여야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안건들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이에 앞서서 오늘 의결할 안건들 중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안건들에 대해서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15항 및 제19항의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등 안건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상세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들에 대한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등 2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및 제10항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및 제14항 등 3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5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및 제18항 등 3건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9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 안건들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외교부 소관 의안 4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을 통해 키르기스스탄과의 조세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이 재정비되고 양국 간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이 증진되어 인적·물적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은 바레인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대한 투자 보호와 양국 간 경제 교류 및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을 통해서도 안도라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조세 부담 경감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은 공해 생물다양성 보호 및 활용 논의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국익 보호, 나아가 국제규범 형성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 의원 발의로 통과된 외교부 소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국회가 추진한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동의안을 심사해 주신 김건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외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건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 한정에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되면 영어·영립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착업무 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전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탈북 청소년을 위한 일부 대안학교 학생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심분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통일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건·김기현·이용선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외동포기본법이 개정되면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함과 더불어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재외동포청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 20. 현안질의

(14시25분)

○위원장 김석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간사간 협의로 7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해서 규제하려 한다 그런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잘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홍기원 위원 외교부는 이걸 언제 알게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홍기원 위원 당연히 언론 보도 이전에 아셨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전에 파악은 했는데 훨씬 이전에 파악은 아니고 며칠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홍기원 위원 민감국가 목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게 에너지부와 밀의 산하 국책연구소, 17개 연구소의 정보라든가 연구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적인 참고를 해야 되는 나라로 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은 아직 우리나라를 그 목록에 넣은 게 아니라 검토 중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게 아니고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미 명단이 확정된 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기원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단정적이지 않고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닌 게 맞습니까, 아니면……

○**외교부장관 조태열** 주미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면 에너지부에서는 검토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나 관계 당국의 의견을 요구받은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내부적으로도 지금 아마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국도 그 관련 경위를, 정확하게 배경과 경위를 저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을 할 것으로 압니다.

○**홍기원 위원** 저는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에너지부에서 이런 명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목록을. 그런데 뭐를 파악을 아직 못 했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에너지부에서 우리에게 사전 통보를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아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걸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에너지부에서 지금 다시 자체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드립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면 미국 에너지부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외교부장관 조태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 게 아니고요 다른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가 재차 문의를 하니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내부 조사와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 주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홍기원 위원** 그 이전에 혹시 민감국가 목록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거나 또는 들어가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언론에 보도돼서 인지하기 전까지는 에너지부에 이런 목록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다 그런 보도도 있던데 그건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건 목록 분류가 세 가지로 분류돼 있다는 건 아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는 없었으니까요.

○**홍기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아직 모르고 지금 에너지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파악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비공식 제보받은 걸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원 위원**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로 분류되는 이유로 세 가지가 지금 명시되어 있던데 국가안보, 아마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를 말하는 것 같고 또 핵 비확산 그리고 테러 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하여간 분류 기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이 돼서 검토 대상인지 이런 거는 아직……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아직 그 경위와 배경조차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세부사항에

대한 답을 들을 상황은 아니지요.

○**홍기원 위원** 그러면 결국 장관님 말씀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온 건 없고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우리가 대사관을 통해서 물어보니 자기네들도 이게 왜 그렇게 정보가 밖으로 나가서 언론에 보도됐는지 지금 파악 중에 있다 이런 단계라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내부 사실관계며 여러 가지를 지금 파악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면 민감국가 리스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언론 보도나 또는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첨단 분야 또는 핵 분야 이런 쪽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하여간 예단하고 있지는 않겠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아니,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고 제 질문은 포함이 되면 원자력 분야나 또는 AI 분야나 또는 여러 첨단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연구 기관들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다 그렇게 언론보도도 있고 또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던데 이거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되면 공동 연구하고 그러는 데 일부 제한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 적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부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건데 아마 몇 년 된 것 같아요. 25개 국가가 이 목록에 있고 상당수 국가는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부가 설명이 돼 있고 또 대부분의 국가 이름들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안보상 위험이 있거나 또는 테러를 지원한 국가이거나 또는 핵확산에 좀 안 좋은 그런 일을 하는 국가들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검토 대상 리스트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지금 단계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홍기원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여기 민감국가 리스트 목록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 국내에서 특히 여당 의원들이 우리나라의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또는 최근에 보면 트럼프 2.0 시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략과 비전 토론회도 열고 이런 문제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보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기원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외교부장관께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취임 일성에서 ‘우리는 4년 내에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팅과 AI의 융합을 보게 될 것이다’, 굉장히 대담한 비전을 제시를 한 거지요.

그런데 확장 가능한 양자컴퓨팅이나 AI 융합은 우리가 미국과 함께 협력하고 싶어 하는 정말 몇 안 되는 과학기술 발전 분야 사업 중의 하나에 속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SMR을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부분도 역시 미국과의 협력이 아니면 흔히 말하는 타개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민감국가로 지정된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있는 원자력이든 인공지능이든 흔히 말하는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하는 단어를, 단어를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제대로 협력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감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그 안에서도 테러지원국이라든지 위험국이라든지 하는 나라들과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과학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중의 하나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검토한다는 것에 솔직히 말하면 경악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한미 관계는, 한미동맹은 그 어떤 때보다도 견고하고 특히나 우주기술, 과학기술 AI,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더 깊은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습시다만 에너지부가 민감국가를 지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인데 여기에 우리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도 않고요.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는 이미 미국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경제·안보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대미 투자국 1위인 나라이고요, 앞으로도 협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테러를 지원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달라진 것은 한국 내에서 약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 그 이슈가 좀 크게 작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심은, 의혹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협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협상이 되기 전에 일단 질러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고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협력하기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더 힘들어지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한국에 어떠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준 것 같지도 않고요. 우리가 지금 뒤늦게 이것을 알고 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쨌든 민감국가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국내에서 여러 방식으로 핵무장과 관련한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방침이나 국가적인 방침은 전혀 변함이 없고 이것은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절대적으로 민감국가로 지정되거나 분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외교적 또는 민관 할 것 없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정이 되어서 분류가 되고 나면 그 후과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한정애 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총력을 다해서 미 조야 관계든 또는 에너지부하든 또는 요즘 NNSA, 핵안보청이라고 하나요, 핵안전청이라고 하나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방첩과 관련된 기관과 함께 해서 분류를 하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명확한 의지를 제대로 밝혀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지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이든 국회 차원의 어떤 결의라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부탁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와 관련한 사항이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후과적으로 닥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안을 계기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이 부분은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를 강도 있게 밀도 있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분쟁지역에서의 NGO 구호 활동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게 해외 구호 활동 관련한 여권 사용 제한이, 아주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비정부단체인 NGO의 분쟁지역에서의 구호 활동이 지금 현재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권 허가가 난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세계 분쟁·재난 지역에서는 국제적인 NGO 단체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진이라든지 특히 국경없는의사회나 이런 데에서는 의료기술 또 구호물품 보급 역량을 활용한 인도적 구호 활동 부분들을 긴급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분쟁지역에서 해외 구호 활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5년 동안에 여행금지국가에서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건수는 2만 7000여 건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여행금지국가에서의 해외 로밍 건수는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NGO 단체가 실제 인도적 구호 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관련 법규·절차를 성실하게 지키면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불허되는데 정작 여행금지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단속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행금지제도가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사유를 대셨어요. NGO 단체에 대한 범위 또는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안전대책 등 요건을 갖춘 NGO 단체라고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회장께서도 안전대책이든 대책들이 우선되고 사람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가운데서 전면적인 개방이 어렵다면

형태와 규모, 목적과 성격, 조직의 운영체계라든지 안전대책과 지원체계 등 외교부가 정하는 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NGO에 대해서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식으로 법안을 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여권법 개정안에 대한 외교부의 의견을 저희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지금도 12·3 비상계엄 소위 내란 행위로 인해서 국가 위기, 헌정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구성과 관련해서 아직 1명의 재판관이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3월 4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전에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해서 의견 수렴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국무위원 전원 또는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은 숙고해야 된다, 즉 상당히 보류적인 부정적인 의견들을 개진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로 벌써 1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도 최상목 대행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오늘도 아마 국무회의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일주일 전 의견수렴절차 과정에서 두 장관께서, 외교부장관이랑 통일부장관 각각 어떤 입장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입장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구체적인 입장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거기 국무위원 대다수가 그런 의견을 같이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그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입장을……

○외교부장관 조태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의 입장은 뭐냐 이거지요. 밝히기 곤란하다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그 얘기를 외통위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통일부장관님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도 통일부장관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재판관 1명 미임명, 소위 국회에서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약 두 달 지연에 대해서 8명 전원 일치로 현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을 한 바 있지요. 그건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용선 위원 지금 헌정 위기를 해결하는 최후의 기구가 현재입니다. 소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최종적 기구인데 현재가 지금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빨리 현재 구성을 완성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당면한 시대적 소명, 탄핵 등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숙제지요. 그런데 이런 현재에서

위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행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또한 위헌 행위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분은 외교나 통일 문제가 아니라고 회피할 문제가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현재 구성과 관련된 현재의 판결을 집행해야 될 대행에 대해 의견 개진을 정확하게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장을 밝힐 수 없다 했습니다만 임명을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대행에게 국무위원으로서 권고할 용의는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국무위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총론적인 답변으로 대신 할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통일부장관님 혹시……

○통일부장관 김영호 권한대행께서도 위원님의 지적에 유념해서 판단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하루속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현재의 결정대로 빨리 신속하게 해서 현재 구성을 완성하기를 촉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통일부장관께 확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외통위 전체회의가 열렸을 때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자제를 요청했다 그렇게 보고했었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자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정식 위원 뭐라고 그랬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상황에 유의해서 탈북 전단 단체들이 신중하게 거기에 대응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정식 위원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때 뭐 여러 가지……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돌발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신중히 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맞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조정식 위원 자제를 요청한 거지요.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서, 아시겠지만 바람의 방향이 남동풍 또는 남서풍, 그러니까 남에서 북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저러고, 이제 풍향이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풍선 살포를 재개하는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

○조정식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통일부가 이걸 지속적으로 저는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더군다나 지금 국내외 정세가 대단히 유동적이고 아직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부는 특히나 우리 외교안보, 남북 관계에서 이런 돌발적인 불안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저는 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 단계에서는.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통일부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특히나 우발적인 전단 살포나 이런 것들, 물론 북에 대해서도 오몰풍선이 날아오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남측에서도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내지 자체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단체들과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장관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4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의회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요. 고율관세와 알래스카 가스관 참여 등등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 행정부와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나, 서로 협의됐던 게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취임 이전부터 취임 이후, 각 레벨에서 우리가 협의 가능한 상대방하고 계속 관련 사항을 총론적으로 논의해 왔고요, 관세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데 의회 합동 연설에 들어갈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한 게 없습니다.

○조정식 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사실이 아닙니다.

○조정식 위원 사실이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조정식 위원 그것 분명하게 정부에서 미 정부에게 다시……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미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설명을 하고 전달했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전달했고 계속 할 겁니다.

○조정식 위원 한국과 미국이 서로 FTA 체결 국가 아닙니까. 상호 간에 수출입 품목이 무관세가 꽤 많아요. 그래서 대미 평균 관세율 자료를 보면 0.79%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게 실행관세율하고 MFN 관세율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소위 MFN 관세율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물론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관계 부처나 미 정부에 대해서 상황과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아주 세심하게 저는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3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조정식 위원** 그리고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검토할 경우에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지금 권한대행 주관 경제현안간담회를 매주 1회씩 월요일 날 하고 있고 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사들 방미 기회에도 카운터파트들하고 필요한 협의를 하고 또 실무 레벨에서도 계속 정보 교환하면서 우리들 입장을 전달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지금 관세정책이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던지는 여러 가지 어젠다들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또한 가변적이라는 속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실제로 거래와 협상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도 같이 동반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잘 보면서 우리가 아주 치밀하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수상이 얼마 전에 미국에 건너가서 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범부처 대응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미국에서 이러이러한 것들 요구가 예상된다고 보고—1기를 경험해 봤으니까—그리고 대미 투자 확대나 무역 흑자 축소 계획 이런 다양한 딜의 카드들을,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아주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그런 준비 하고 있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외교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조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 공백과 권한대행 체제에 의해서 근본적인 한계와 입지가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위원도 미국을 방문해서 미 전문가들 만나 보면 딱 얘기가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만 상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장관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는 무엇보다 외교부와 장관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그리고 외교부가 관련 부처와 항상 긴밀히 협의하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한미의원연맹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의회 차원에서도 서로 촘촘히 묶어서 협력하면서 대미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향에서 장관님이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 장관님, 우선 먼저 민감국가라는 것이 참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나쁜 얘기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잘못했기에 민감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항의는 하셨는지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외교부장관 조태열 사실관계 확인된 다음부터……

○인요한 위원 확인한 다음에?

○외교부장관 조태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요한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만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외교부장관 조태열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고요. 좀 알게 되면 그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위원 저는 이거 읽어 보는 순간에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북쪽에서 핵잠수함 건조하고 있다는데, 호주도 미국 기술을 받아서 핵잠수함을 만들고 또 북쪽에서 하는 게 SLBM도 아마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거기에 좀 뒤떨어져 있다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 쪽하고 협상해 나가는 데 앞으로 계획이 뭔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질문은 여러 번 나와서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고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입장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감국가 그런 거와 연관돼서 논의되는 얘기들도 충분히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위원 사실 미국 오바마 정권하고 바이든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북한하고 협상을 안 했어요. 방치를 한 것같이 보여요. 그래서 핵에 이렇게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 자체는 좋아서 우리가 핵을 따로 보유하려는 게 아니라 형평성 때문에 또 억제력 때문에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인데 오히려 대한민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핵을 갖고 그다음에 북쪽하고의 어떤 제재는 그냥 풀어 버렸으면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패싱이 될까 봐, 트럼프 정권이 북쪽하고 직접 얘기할까 봐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다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4배 관세라는 것 혹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좌관들도 부탁을 해서 이걸 굉장히 깊이 조사를 해 봤는데 관세가 4배라는 것은 근거가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한국이 4배를 더 가하고 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FTA를 체결했으면 아까 조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관세율이 제로에 가까운 거기 때문이에요 4배라는 것은 실행관세율에 비취서는 사실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얘기고요.

그래서 4배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관세율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세율, 관세율 표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했는지를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사실과 동떨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요한 위원 옆에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께서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는데 북쪽 군인이, 최소한 부상 포로 2명 중의 한 분은 대한민국을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데요. 좀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먼저 선택할까 봐 걱정스러운데 혹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신 것 있는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보도에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분명히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요. 포로의 인권 문제 그리고 또 본인의 자유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분명히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틀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위원 통일부장관님께서서는 혹시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회의를 갖거나 준비하는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그분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될 경우에 그분들이 잘 정착하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요한 위원 외교부장관님, 아마 알래스카 가스선을 묻으려고 그런 것 같다, 묻지 않고 노출하지요. 그 가스 파이프를 묻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노출할 것 같은데 일본하고 같이 요구를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철저한 협상가입니다. 책도 보니까 모든 게 영어로 ‘딜메이킹(dealmaking)’ 이래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게 꼭 대단히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있어서 그게 완공됐을 때 대한민국이 그거에 대한 대가 플러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태스크포스나 협상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알래스카 LNG를 우리가 구매해 달라 그리고 거기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 하는 게 미국의 관심 사항입니다. 그 대상 국가가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고 또 대만도 일부 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협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결정된 바 없고 우리도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색해 가면서 협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요한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대한민국이 핵을 꼭 보유하자는 건데 불가피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워낙 오랫동안 이북, 북쪽에서 이걸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조태열 장관님, 독일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계엄 옹호 다큐멘터리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내려 가지고 저는 못 봤습니다.

○**이재강 위원** 저희들이 독일 방송을 캡처한 게 있는데, 다큐 내용입니다. 한번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독일에 그대로 방영이 될 예정이었는데 마치 계엄이 합법적인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윤석열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전광훈이 당당하게 나와 가지고 사실과 완전 다른 부정선거를 운운하고 있고 타국의 방송이 대한민국 야당에 대해 친중국·친북한 사법 카르텔이라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외교부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국격을 떨어뜨리는 사실과 다른 타국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삭제·정정 보도 요청을 하는 것은 외교부의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미 그 해당 방송사가 삭제하고 내렸습니다.

○**이재강 위원** 잠시만요.

잣대가 다릅니다. 작년 대통령 체코 순방 때 김건희보고 사기꾼이라 했다고 한국대사관이 즉각 기사 삭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수정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측 대사관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했고 당시 언론사는 기사 전체를 삭제하지는 않고 사기꾼이라는 표현만 삭제했습니다. PPT 보시면 그때 수정된 사항입니다. 제목이 바뀌었지요. ‘사기꾼이 파벨의 성에? 대한민국 영부인은 거짓말을 하고 수백만 달러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수정이 됐지요. ‘흠결 있는 영부인이 파벨 앞에?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여러 차례 조사받았다’, 그렇지요. 첫 문장도 삭제되었습니다.

이때 외교부 당국자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PPT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외교부 당국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보도를 내보내는 언론사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것은 재외공관 업무 중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것은 재외공관 업무 중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게 재외공관 업무가 맞습니까? 이런 잘못된……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재강 위원** 그런데 이번에 방송이 안 됐지만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독일 방송에 대해서 외교부는,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타국 공영방송의 보도 내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외교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김건희한테 사기꾼이라 했다고 체코 언론에는 즉각 삭제 요청을 해 놓고 이 건은 정부 차원의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까? 왜 잣대가 달라졌습니까? 김건희의 이야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거는 영부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보도고요. 이거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공영방송의 보도니까 내용이 다르지요.

○**이재강 위원**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게 왜 다르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사실이 아니냐 맞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타국 정부가 어떤 다른 나라 언론 방송에 잣대를 대고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강 위원** 그런 기준으로…… 잣대가 왜 다르냐는 말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보도하고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보도하고

같을 수가 없지요.

○**이재강 위원** 그런데 이 영상을 삭제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영상 풀 버전으로 지금 유튜브에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찾아서 삭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동영상도 지금 수백만 개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강 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독일 공영방송 이야기입니다. ARD하고 ZDF 이야기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글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삭제요구를 하겠습니까?

○**이재강 위원** 김건희는 공직자도 아니고 일개 개인일 뿐입니다. 김건희 개인에 대한 기사는 발작하듯이 삭제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격을 훼손시키는 계엄 옹호 보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재강 위원** 아니, 이거는 외교부 태도가 다른 잣대로 업무를 판단하고 할 일을 안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누누이 국내 정치 상황과 인신공격성 보도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강 위원** 혹시 외교부가 이러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의 성격이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임상범 주독일 대사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재강 위원** 윤석열 정부의 첫 안보전략비서관입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랑 가까운 사이인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독일에서 이 영상이 제작돼 방송된 것에 대해서 독일대사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데 지금 방송이 좌절되었지만 이것이 방송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영상이 제작 방송된 것에 대해서 공식 항의하는 것이 외교부의 제대로 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게 처음 방송된 건 2월 27일인가로 제가 들었고요. 대사관이 알게 된 건 3월 4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도 아마 독일에 있는 교포 한 분이 방송을 보고 연락해서 알게 된 걸로 알고 저희가 보고받은 건 3월 6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출장 중이어서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재강 위원** 그때 방송이 나왔을 때 그 방송 내용을 비판하는 한국의 신 모 교수님 것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 있는 이은정 한국학과 교수가 그거에 대응하는 것을 전국에 전파를 다 했습니다. 실제로는 외교부가 할 일을 일 개인이 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방송의 시청률이 0.00 몇 %입니다.

○**이재강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잣대가 다르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시중에 풀 버전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송이 제작된 경위를 좀 파악할 수는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글썽요, 그거는 지금 이미 다……

○이재강 위원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자체 판단에 의해서 내리고 삭제하고 그랬으면 저는 충분히 방송사로서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강 위원 저는 외교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건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방기했다고 봅니다. 혹시 방송이 제작된 경위를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할 수는 있습니까? 보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글썽요, 대사관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꼭 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외교와 과학기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민감국가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국방과 안보 문제가 전통적인 외교의 중요한 문제였다가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이 사실 우리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민생에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기술 패권 경쟁이 전 세계의 외교 관계의 주요한 축으로 등장한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외교와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과 경제 이 사이의 시너지를 확보하는 게 한국이 적어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그 언저리라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에서 중점으로 잡는 미래 산업 먹거리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AI라든가 바이오 그런 컴퓨팅……

○차지호 위원 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국민의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AI와 양자컴퓨터 같은 고성능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실 한반도의, 한국의 미래 생존과 연 관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단순히 특정 산업만 전환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체 경제 산업구조를 전체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이런 나라들은 그 어떤 때보다 AI 관련해서 격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은 글로벌 3강의 지위에 있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 중요한 게 글로벌 협력입니다, AI 분야. 이런 첨단기술 같은 경우는 한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한계가 있고 여러 국가들과 기술 협력에서 도외시되고 소외돼 버린다고 하면 사실 그 국가는 아무리 큰 내재적인 자원이 있어도 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민감국가로 올라와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이 얘기하실 때 이거를 연구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정도라고 서술하신 것 같아서 그게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너지부가, 과학기술을 하는 데가 왜 민감국가 카테고리를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핵무장과 같이 특정 과학기술을 가지고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 주로 리스트가 된 국가들을 보면 테러리스트 국가들이었지요. 그런 국가들을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과학기술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통제하기 위해서 리스트업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연구 협력만의 제한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국가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 혹은 그 국가에서 미국과 기술 교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룹들, 그러니까 이 국가와 연관된 모든 기술 협력들에 대해서 경고 사인이 붙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가 전 세계의 글로벌 AI 경쟁 이런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 국가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보시면 이거 관련 된 협이나 거버넌스 모델을 만든다 이런 것도 엄청 하시고 외교부장관님께서도 취임하신 이래로 AI 국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사실 이 핵무장과 같은 굉장히 좀 너무 안타까운 주제지요, 이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 것과 연관돼서 사실 실효성도 없고 지금 당장 할 수도 없는 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기술 경쟁의 시대, 우리가 앞으로 민생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가 달린 이 문제들에 대해서 거의 파괴하다시피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민감국가로 우리가 들어가서 고위험 국가, 아까 인요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우리가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야 될 일입니다. 한국이 그런 국가군 안에 들어가서 해외투자나 아니면 기술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막혔을 때 그간에 한국이 했던 외교부를 넘어서 과학기술부나 아니면 각 기업들 그리고 온 AI와 양자컴퓨터 같은 첨단산업을 연구하는 이 그룹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난 십수 년간의 노력은 단순간에 굉장히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이 문제의 중요성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일부 연구의 문제다, 협력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장관님과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하면서 겪게 된 많은 현안 중에 저는 이것만큼 경고 사인이 들었던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계엄 이후의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기능들을 하기 어려울 때 이런 특정 정치권의 목소리, 핵무장론 같은 목소리가 결국 우리 경제와 산업과 과학기술을 파괴시켜 버리는 이런 영향들 그리고 그 영향들을 미리 예측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참담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장관님께서 중요성을 축소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밀고 나가시고 국민들, 특히 국민들과 함께 외교부 외 과학기술부나 산업부 이 전반적인 정책 부처들과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 몇 달간의 과도기적 상황 안에서 막혀 버린다고 하면 한반도의 미

래 먹거리가 산산이 그 토대를 잃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 AI나 양자컴퓨팅에서 가장 앞선 기술들을 가진 나라와 연구 협력 혹은 산업 협력, 투자 협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도태될 수 있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실관계 파악을 한 후에 걱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심각성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동을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부디 그 사실관계 파악하는 과정에 여러 전략들이 이미 활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그 말씀 이전에 이미 충분한 심각성을 느끼고 준비하고 계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이것은 외교부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알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국가 여러 부처, 경제 부처, 산업 관련된 부처, 과학기술 부처 전반과 비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이 두세 달간에 이런 일들이 망가지지 않게 꼭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승 위원 권철승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이재강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계엄 이후에 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복원력이 작동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권철승 위원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권철승 위원 지난 2월 25일 독일 공영방송, 아까 이재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송의 내용을 보면 황당합니다. 조금 요약을 하자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고 지금 국회를 구성한 총선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고 야당과 탄핵 찬성자들이 중국과 북한의 영향하에 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장이 다 동의하기 어렵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방송사가 다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균형을 잃은 보도라고 판단해서 내리기로 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게 무슨 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방송이, 그 다큐멘터리가 나중에 재방송되기 전에, 내리기 전의 판단의 근거가 균형을 잃은 보도였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삭제하기로 했다는 게 해당

방송사……

○권철승 위원 균형을 잃은 보도라고 판단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균형을 잃었다고요.

○권철승 위원 예.

그런데 이 관련해서 아까 잠깐 질문이 있었는데요 외교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타국 공영방송의 보도 내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덧붙여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차적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 말은 어떤 단위에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판단의 결과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대사관에서 일단 상황 파악하는데 3월 4일 날 처음 알아서 6일 날 그 해당 사가 내릴 때까지 이틀 정도 있었는데 그 상황 파악하는 사이에 그게 상황이 종료돼 버린 겁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누가 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당연히 대사관에서 무슨 대응을 하려면 이게 뭔가, 무슨 배경인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철승 위원 이 최종 판단하고 조치를 내릴 때까지 책임자가 해당 대사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보고하느라고, 그 대사관은 모니터해 가지고 보고하다가 상황이 종료가 된 겁니다. 저는 이미 상황 종료된 후에 출장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권철승 위원 장관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 판단, 이것은 대응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일차적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디에서인가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대응하지 말자.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이틀 동안에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상황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권철승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저것 상황 파악하다가 아무런 판단을 못 한 게 아니고 이것은 대응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 판단을 했었다 그렇게 답변이 와 있습니다. 이 판단을 누가 했는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권철승 위원 답변이 안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은?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러니까 현지 공관에서 서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즉각, 뭐가 상황이 판단이 돼야 즉각 대응을 하고 할 텐데……

○권철승 위원 판단이 안 됐다는 게 아니니까요. 일차적 판단을 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바로 상황……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보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사관이……

○권철승 위원 장관님, 이것 혹시 장관님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철승 위원 독일에서 이런 방송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말까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몰랐다니가요. 제가 파리 출장 갔다 3월 7일 날 처음 들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면 장관님은 모르셨겠지만 장관님 예하 누군가가 이 내용을 알고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답변이 왔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요, 이틀 사이에 뭔가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한 것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그것은 상황 파악……

○권철승 위원 제가 이 문언에 따라서 질문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일차적 판단이 있었다고 답변이 왔는데 판단한 사람이 없다는 게,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공관에서 그렇게 해서, 일차적인 판단을 공관에서 하지요.

○권철승 위원 그러면 공관입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공관이 즉각 대응하지 않고 서울에 보고를 하는 그 이틀 동안의 판단이 그런 판단이었다는 거지요.

○권철승 위원 아니, 자꾸 끝을 흐리지 마시고요.

공관에서 판단했다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겠지요.

○권철승 위원 공관에서 판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나중에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국 더 타임스도 그렇고 대파 논란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었어요. 아까 김건희 여사는 인신공격성 발언이기 때문에 수정 요청을 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듣기에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대파 관련해서는요, 제가 여러 방송에 나온 것 말씀드릴게요. 외신입니다. 프랑스 AFP 통신 ‘대파의 외침. 보잘 것 없는 야채가 한국 선거를 휘젓다. 김치를 포함해 한국 요리에 널리 사용되는 대파가 4월 10일 투표를 앞두고 논의를 지배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시아뉴스네트워크 또 AP, AFP 다 나왔습니다. 미국 ABC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대파. 대파가 선거 공격수가 되다.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채소 대파가 예상치 못하게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는 최신 무기가 됐다’.

이런 게 대응할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필요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면 필요를 못 느끼는데 왜 저런 대응을 하셨어요, 외교부에서?

○외교부장관 조태열 사기꾼이니 뭐니 하는 그런 얘기가 인신공격성 보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권철승 위원 그러면 대파는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대파는 대파지요. 대파가 무슨 문제가 있는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실 내용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응을 하셨어요, 외교부에서.

○외교부장관 조태열 사기꾼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보고서 대응한 거지요.

○권철승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나온 보도입니다. 사기꾼 문제는 체코에서 했고요.

제가 더 질문하면 답변이 더 궁색해지실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쪽에 편들어서 대응하지 마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공무원이 편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권철승 위원 그것은 아주 원칙적인 말씀인데 제가 수집해 놓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그런 외교부가 되시면 안 되고요. 또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장관님의 방침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독일 방송 같은 것을 알고도 가만히 놔뒀다, 가만히 놔두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일차적 판단을 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조치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몰랐습니다, 아예 팩트 자체를.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이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누군가가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대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외교부장관님, 최근 폴란드 다녀오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유용원 위원 폴란드 며칠 다녀오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1박 2일 했습니다.

○유용원 위원 아주 짧은 출장에 타이트한 일정을 보내신 것으로 아는데 주로 K-방산 수출 관련해서 고위 관계자들과 회의도 하시고 일부 현장 방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우리 방위산업의 저력을 현장에서 실감을 했고요. 민스크 공군기지의 FA-50 전투기는 제가 직접 올라가서 시승도 해 보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는 교육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인식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유용원 위원 저도 우크라이나 들어가기 전후로 폴란드의 K-방산 수출 현황을 좀 받고 민스크 기지도 가 봤는데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폴란드 공군 관계자들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도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우리 K-방산 수출에서 큰 고비로 평가받는 게 K-2 전차 2차 사업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이번에 노력하신 것으로 아는데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장관님께서 노력하신 결과 조만간 계약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요 어떤가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다 노력해서 90% 이상 됐는데 마지막 협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한두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는 것 그것들을 정부가 개입해서 원만하게 풀자 하는 그런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스피디하게

남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조만간 좋은 결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간 게 마침 우크라이나 개전 3주년을 전후해서였습니다. 지난달 24일에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주재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총 37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전 3주년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원래 예상치 않았었는데 운 좋게 옵저버(observer)로 참석을 해서 정상회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여러 형태의 거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EU 등 유럽 국가들이 소외된 데 대해서 강한 불만, 어떤 경우는 거의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표출한 경우도 있었고 공통적으로 방위비 증액, 군사력 증강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충돌하는 그러한 사안이 있었고 그래서 유럽은 방위비 증액,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지는 분위기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K-방산에도 기회가 올 수 있다 해서 방산 주식도 많이 오르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꼭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스스로 EU, NATO 국가에서 만든 무기를 위주로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 열려 있는 기회의 창이 그렇게 시간이 길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외교부도 방산 수출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조금 지엽적인 것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좀 작은 사안이지만 장관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미국과 독일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155mm 모듈형 추진장약, 이 장약은 포탄에 추진력을 부여해 주는 그러한 구성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수입 요청이 온 게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구체적인 그런 것은 외통위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신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유용원 위원 하여튼 민감하게 판단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요지는 전에 폴란드에 크랩이라는 자주포를 수출할 때 우리가 차체만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에도 지원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체 자체는 살상용 무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장약의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북한군 포로 문제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인요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거래에 의해서 북한군 포로가 최악의 경우 북한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냥 여러 가지 설과 루머만 있고 구체적인 것은 우크라이나 외교부

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협의하게 되면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뭔지, 다른 관계국들한테 무슨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유용원 위원** 제가 알기로 북한군 포로가 우리나라에 오려면 우리와 우크라이나의 협의·협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국제적십자사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로가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런데 지금 그런 국제적십자사의 확인 작업은 거친 상태인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가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포로 송환 관련해서 우리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외교부입니까, 통일부입니까, 아니면 국정원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조금씩 다 관여가 돼 있겠는데 그것은 하여간 관계부처 협의해서 한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제가 봤을 때 포로 송환 문제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외교부가 주도하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공기가 탁해서 문 좀 열지요.

○**위원장 김석기** 예, 그러시지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어제지요, 어느 언론에서, 여러 언론에서 미국의 에너지부가 우리나라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한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인요한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분 나빴다. 그리고 화가 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홍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장관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완전히 분류된 게 아니다.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다.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공식적인 라인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그리고 확정된 것도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을 잘 읽어 보니까 에너지부에서 17개의 산하기관—국립연구기관들이지요—거기에 공문을 보낸 것에 근거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 공문. 그런데 그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3월 초에 에너지부가 17개 산하기관에 공문을 통보했는데 ‘4월 15일 날부터 실행한다’ 그런 정도의 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그렇다고 추정……

○**윤후덕 위원** 3월 초에 에너지부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내부의 문서잖아요. 내부

문서를 다른 나라한테 알려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윤후덕 위원 그러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17개 기관들한테 보내 줘서 이대로 되면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한국을 포함해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신원조회를 확인하고 연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4월 15일 날 확정되는 거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 공문에 의하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외교부에서도 이 정도 공문은 확보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아니에요, 미국 국책연구원 그런 데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한국인 연구자들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알려 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문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교부에서도 가지고 있고 주미대사관에서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것은 서로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4월 15일까지, 지금 이제 3월 11일이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민감국가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런 나라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사우디 등등 해 가지고 그중에서는 테러국가도 있고 핵 불량국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테러국가는 또 따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따로 있지요. 그런 식으로 분류돼 있는 게 그전까지 21개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5개 나라를 또 분류하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에 외교력을 집중해서 4월 15일 확정돼서 시행되기 전까지 이것을 해지시키고 한미동맹이라는 정신에 의해서 외교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하여간 상황 파악하고 경위 파악하고 그다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 사실은 맞는데 아직 진행 중인 거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반드시 이것 해제될 수 있게, 거기에 분류되지 않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지 않으면 걱정되는 게 많아요. AI, 과학기술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첨단기술에 대해서 미국의 국책기관들과 공동협력하는 것에 제한을 받잖아요. 아까 홍기원 위원 얘기하실 때 답변하실 때도 공동연구에 제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 많은 원천기술하고, 그런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동연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이 계속 처지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것 심각한 거더라고요. 장관님, 이것 꼭 해주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응원을 드리고, 꼭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해내야 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지난번에 대북전단 풍선 그리고 대남 오물 풍선

이런 것은 요즘은 없어요. 그런데 확성기는 계속하잖아요.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엄청 커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제가 한번은 여기 외통위의 국정감사 가려고 인천공항에 나가서 이렇게 가는데 피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것 듣다 듣다 보니까 이게 북한에서 북한 놈들이 송출하는 대남 확성기에 의한 그 피음이더라고요. 외국 사람들 다 이것 듣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결 좀 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우선 정부에서 민방위기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하고, 시행령을 지금 만들고 있고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장관님,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민방위기본법의 시행령 그것은 불편한 것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하루에 16시간 동안.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에 대응해 가지고 고출력을 만들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NSC에 가서 국방부에 이것은 좀 자제하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지난번 회의에서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무선에서 일단 국방부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으로 지금 조금 바쁜 것 같습니다. 연합훈련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추가질의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윤후덕 위원** 그러면 그냥 할게요.

재외동포청장님, 해외입양인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주 의미 있는 파주의 엄마품동산에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6월 달에 그것보다 더 큰 의미의 행사가 있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미 에너지부에서 센서티브 컨트리(sensitive country)로 분류됐다는 이 이야기 자체가, 이런 말이 어쨌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차지호 위원의 그런 우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이번에 여야 의원 해서 국제 글로벌펀드 기구,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영국 런던과 스위스 제네바의 많은 기구들을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 이후에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두고 거의 멘붕에 빠졌어요. 지금 말라리아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차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계획이 지금 엄청난 차질을 빚으면서 우려를 하고 있고 텐션의 강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을 보는 시각은 매우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달라지고 있다. 우리 ODA 사업이 최근 한 4배 이상 다 줄어드는 그런 국가의 흐름에 반대로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에서 굉장한 기대와 그런 반응들을 저희들이 실제 확인했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외무부 산하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청. 개발원조청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태호 위원 여기의 주요 키맨들을 만났는데 정말 지역사회, 의회, 시민단체가 이 3년의 계획을 굉장히 타이트하고 세밀하게 서로 논의하고 그것을 스위스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엄청나게 심도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 우리 한 40여 단체 정도가 ODA 사업에 참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는 관계성이 굉장히 좀 불투명해서 과연 ODA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스위스가 이런 개발청을 통해서 인도주의 사업이라든지 또 민주주의 확산, 평화공존 촉진, 빈곤 완화, 다양한 양자·다자 간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국격에 걸맞은 위원회든지 청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기구는 통합적 관리 차원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통합적 관리를 그냥 위원회에서, 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꽤 앞섰어요. 장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어제오늘이 아니고 외교부가 개발협력의 주무부처가 돼서 일원화되는 것이 좋다는 게 저희 외교부 입장으로 10여 년 전부터 그런 통합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 내의 이견이 있고요. 또 기재부는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고 외교부는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이원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약간의 비용이 있고 또 국무조정실이 종합·통합하는 부처로 관여하고 있어서 약간의 분절화 현상이 오래된 고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통합해서 만드는 문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성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태호 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양적·질적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고민 위에 실질적인,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태호 위원 그러면서 동시에 통일부장관님, 지금 우리가 남북한 접경지역에 말라리아, 이게 2023년도 보니까 1월에서 6월 사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이상 엄청나게 증가된 환자 수가 생겼어요. 물론 여기의 여러 가지 원인을 기후변화에 대한 모기 서식지

의 그런 문제라든가, 특히 남북 간의 공동방역이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래서 이런 원인을 꼽고 있는데 사실 질병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진짜 남북체제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전체 생명체 공동의 동등한 가치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고민을 좀 해 봤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과거에는 남북한에 경기도라든지 도에서 말라리아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교류도 하고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에서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일체 접촉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원한다고 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그 채널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호 위원** 장관님, 예를 들어서 실제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서 지금 북의 문제, 북의 문제가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게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접촉한 사례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지금 북한이 코로나 이후에 국제기구 요원들을 아직까지 북한 내부, 평양 이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한이 국제기구 요원을 받아들이는 그 움직임을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부도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물론 저는 컨틴전시 플랜이 A, B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상황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에너지부 문제를 저도 조금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 민감국가로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확정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유사한 지정 과정을 보면 일단 우리가 거기의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지정의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파장·타격은 상당히 클 것 같고 앞으로 또 추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잠재적인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4월 15일부터 분류한다는 정보가 일차적으로 있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때까지 확정하기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우리가 소명을 하거나 우리 입장을 밝힐 그럴 기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절차도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그다음에 절차 문제가 논의될 텐

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경위와 사실관계 자체를 에너지부 내부에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연락을 하겠다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성락 위원** 그러면 미 측하고 알아보시고 그러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입장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명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해당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영역은 대개 한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핵 비확산일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지역 불안정성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꼭 해당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핵 비확산 문제가 제기됐을까 따져 볼 때, 사실 국내에 핵무장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비등하지 않습니까? 여론도 지지를 많이 하고 한국 내 핵무장을 지지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 측에서 우려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만약에 민감국가로 분류가 되면 과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잘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대처 과정에서 제 전제가 맞다면 핵무장론에 대한 우리 입장을 잘 소명하지 않고는 이것을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입장 정립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는 물론이고 과기부 등등 범정부적으로 잘 대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여러 가지 추정하는 논리 중의 하나로 그런 말이 도는 것은 일응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인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내부 경위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긴 일회성,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예단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경위가 차차 밝혀진다면 그 모든 원인과 배경을 다 살살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락 위원** 예단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단하지 않다가 우리의 대비가 미진해서는 안 되니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위성락 위원** 다음으로는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들어서서 권한대행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권한대행이 고위직 인사를 하는 데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직무정지 사유가 비상계엄이고 또 그것에 따른 탄핵과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근 보도를 보면 공관장 인사를 준비하고 있고 특임공관장으로 방문규 전 산업통상부장관이 인도네시아에 간다 또 그 외에도 군 출신 특임공관장이 몇 분 더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서 국내 사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아그레망이 늦게 도착한 나라도 있고 그래서 사안별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명 경위와 그 사람의 전문성과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공관장 임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차 공관장 임명을 했고 신임장도 부여를 했고요. 나중에 부임할 준비를 하는 공관장도 있고 또 순차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공관장님이 몇

분이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락 위원** 특임공관장은 정치적 임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해 왔다는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임명을 추진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직무수행이 정지된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하려던 인사가 권한대행에 의하여 임명이 된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기를 바라고 이런 일이 꼭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저도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잠시 몇 가지만 짚고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에너지부에서 산하기관에 보낸 문서의 내용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언론에 나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보고받으신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재정 위원** 그 문서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문서 자체는 못 봤고 내용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비단 외교부만 관계된 게 아니니까 저도 여러 부처에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유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과 관련된 우려 때문이라고 타 부처에도……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보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재정 위원** 보도 내용인 것이고 타 부처에서는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보고 안 받으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에너지부 자체가 경위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저희들한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정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선을 통해서 취합한 내용을 일응 정리해서 장관님께는 보고할 것 같은데……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요, 전혀. 보도에 나온 수준 정도로……

○**이재정 위원** 4월 15일 시행이 될 건데 최선을 다해서 외교력을 발휘하려면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지정되려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 될 회복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지요.

○**이재정 위원** 그냥 가서 ‘저희 빼 주세요’ 한다고 빼 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러니까 에너지부하고 긴밀히 그것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정 위원** 장관님이 이 문제를 기꺼이 단언해 얘기하시기에는 얼마나 불편하실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보도에서 확인하고 있고 저도 다른 부처 또는 여러 경로로 크로스 체크하기로는 핵 문제와 관련된 핵 비확산의 지점에 대한 한국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럴 만도 하겠다 싶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의 수장이 마음

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된다는 얘기를 설혹 그렇다 할지라도 서슴없이 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니고 그저 코멘터리하는 일개 의견을 가지신 기자나 평론가들이 아닌 여당 의원들이 무분별하게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들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혹시 이 일이 있기 전 또는 핵무장론이 무수히 제기되던 당시에 미국 조야를 만나면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싱크탱크에 있는 분들은 한국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세 동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가끔씩 나온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이재정 위원 저는 유독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핵무장론이 국내에서 제기된 얼마 후부터 말씀하신 싱크탱크는 물론이고, 미국의 의원 만나기만 하면 그간에 그런 핵무장론에 대한 국내의 뼈죽뼈죽한 문제 제기들이 없었던 게 아닌데 왜 자꾸 이 문제만 주구장창 물어볼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전조들이 오늘의 결정까지 결국은 빌드업 된 게 보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 사람, 물론 외교 현장에 있는 우리 부처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은 이 문제 제기를 먼저 하셨던 책임져야 될 정치인들, 특히 다른 정치인들도 아니고 여당의 정치인들이 서슴없이 이런 얘기 하시고 대통령 입에서 핵무장이라는 얘기를 했던, 그 당사자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계엄 선포가 영어로 뭐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어 디클러레이션 오브 마셜 로(a declaration of martial law)요.

○이재정 위원 계엄 선포, 우리 한글로 줄이면 한자를 차용하다 보니까 네 자인데 참 길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유엔 제네바, 뉴욕 포함해서 10여개 국의 의원들을 만났어요. 양자회담을 제가 요청해 가지고 다 만났는데 저는 힘들게 계엄 선포에 대해서 긴 영어 단어로 얘기를 했더니 일축해서 묻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쿠데타’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장관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계엄 선포 자체가 가져온 한국인만이 아닌 전 세계인의 충격과 계엄 선포 자체에 이미 평가되어 있는 상식적인 시민들의 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사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탄핵이 불법이다’. 그리고 이런 홍보가 외교부 산하 공무원 또는 외교부로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이런 홍보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부적절하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어떤 단체가 그런……

○이재정 위원 만약에 외교부 산하의 공무원이든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이런 홍보를 한다면 부적절하겠지요? 이 자체에 대한 평가적 언어는 제가 요청드리는 게 아닙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글썽요,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이재정 위원 다시 보겠습니다.

민단 지부의 간부가 민단의 소통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인 분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지요. 노란색 대화방이 아마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민단은 응당 중립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정보 공유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런 집회를 홍보하는 게 정보 공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단에는 우리 정부에서 매년 얼마나 지원하고 있지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 해……

○이재정 위원 80억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야당의 간사이면서도, 증액을 요청할 만큼 민단이 하고 있는 역할들 그리고 또 일본에서 그 역사 안에서 해 왔던 역할들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민단 안에서 간부로 선임되어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 구성원들도 동의할 수 없는 이런 편파적인 정치 홍보 그리고 극우적·반헌법적 집회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김건입니다.

지금 저는 독일 공영방송이 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현 국내 정치 상황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계엄을 선포했다가 이게 해제가 된 다음에 탄핵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탄핵으로 갔는데, 그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은 대통령의 국내적 지지도가 엄청 높아지고 그다음에 길거리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숫자로 나와서 데모를 하고 그런 현상이 사실은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되기가 힘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래서 그것을 탐사한 겁니다, 독일 공영방송이. 탐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취재한 것이고 그걸 보여 주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균형을 유지하려 그랬지만 결국은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시위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라든가 이런 분의 목소리도 담고 다 담긴 거지요.

담긴 거지만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그냥 국내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미증 갈등이라는 요소도 이 안에 다 녹아들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이 편파적이라고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용이나 개방성에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남의 나라 방송이 하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게 사실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같아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3월 7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국제외교협력본부가 우리 외교부를 극우 외교협력부라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안 한다고 하고 심지어 장관님의 고조부, 조부, 선친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막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

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도망가듯이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야당의 요구사항은 지나친 것이고 적절하지 않다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4월 2일 날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건 위원 애당초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관세가 거의 0%니까 우리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건 위원 그랬는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들어 보면 우리가 상호관세 대상이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세가 4배가 높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상호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관세의 대상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나요, 장관님?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인데 이미 상호관세를 때렸고요. 그런 것에는 관세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비관세장벽도 관세화해서 그래 가지고 또 무역수지와 관련시켜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관세장벽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만약 상호관세 조치에 우리가 해당된다고 하면 우리가 관세를 얻어맞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 사무실에 찾아오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나 회의에서 만난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게 그러면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관세 또는 보복 조치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우리는 보복이나 대립적인 것보다는 윈윈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지만 윈윈하는 해법이,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윈윈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복 또는 대응 조치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건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효과적인 대응 조치, 왜냐하면 똑같은 물품에 대해 똑같은 관세를,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효율적인 대응 조치는 항상 생각한다 이 정도의 자세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하여간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서 저희 국익에 뭐가 합당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북한에서 갑자기 핵잠수함 얘기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건 위원 그래서 지금 북한이 5대 전략무기를 개발한다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5대 전략무기에 대해서 이게 뭔지는 정확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대 전략무기를 5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탄두 ICBM, 두 번째가 극초음속 미사일, 세 번째가 정찰위성, 네 번째가 여기에 나오는 핵잠수함, 마지막 다섯 번째가 우리를 향한 전술핵무기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차례차례 다, 지금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걸 공개하고 실험 들어가고 했는데 이제까지 안 나오고 있던 게 핵잠수함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은 김군옥영웅함이 나올 때 북한 김정은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핵미사일을 쏠 수 있으면 자기는 핵잠수함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정말로 핵잠수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북한이 추구하는 5대 전략무기가 마지막을 향해 간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북한도 대미 협상에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응 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여러 가지 바게닝 레버리지(bargaining leverage)를 높이기 위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태영호 처장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애니 챌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여쭙봤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태영호 예.

○김영배 위원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그분 남편분이 홍콩분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아마 애니 챌,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태영호 예.

○김영배 위원 이분이 만든 부정선거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단체의 고문으로 태영호 처장이 올라 계시는데 그것 삭제하라고 요구하셨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태영호 예, 지난번 전체회의 때 저도 처음 알게 돼서 전체회의 끝난 뒤에 알아보고 삭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단체에서 지금 삭제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이분 평통자문위원에서 해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태영호 해촉 사유가 되는지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것은.....

○김영배 위원 검토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태영호 예.

○김영배 위원 검토하고 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님, 독일 방송의 프로그램이 뭐가 문제인지 같이 한번 보시지요. 읽어 드릴게요.

‘한국의 야당은 수십 년간 북한과 중국 두 정권과 가까운 정당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소위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위해 보수적인 친미 여당과 대통령과는 달리 야당은 미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군사 협력을 매우 비판적으로 봅니다’.

넘기시지요.

‘야당 정치인들은 반복적으로 점령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당의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그가 정부와 대통령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과 북한은 한국에서 적극적인 작전을 수행합니다. 중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약 100만 명의 화교들을 기반으로, 북한은 간첩활동을 통한 침투로 말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요원을 모집합니다’. 여기서 요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요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국가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과거에 북한으로부터 여러 차례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중요 기관 특히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공정한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하여간 언론을 본……

○김영배 위원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

○김영배 위원 다양한데, 이게 독일 공영방송에 방송이 됐는데요.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저 방송 내용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제가……

○김영배 위원 공직자로서의 답변을 묻는 겁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외교부장관 조태열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김영배 위원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국무위원으로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김영배 위원 아, 외국에서 저런 내용이 나와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는 그냥 다양한 의견이니까 가만히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거에 정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방송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국무위원으로서 가지는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요, 생각이라는 게 어떤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이러니까 문제지요.

3월 8일 날 파리에서 돌아오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3월, 예.

○김영배 위원 폴란드 가셨다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토요일 날 저녁에 왔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동안에 모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3월 7일 날 금요일 날 파리에서 들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외교부는 장관 부재 시에 업무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안 계실 때는 보고 안 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거의 매일 합니다.

○김영배 위원 매일 보고를 하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영배 위원 그 보고를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이메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누가 보고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 보좌관이 따라왔기 때문에 각 부서로부터……

○김영배 위원 보좌관이 하는데요 보좌관이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냐고요. 기조실장은 기조실장, 모아서 보고하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닙니다. 그냥 각 담당 국장들이나 1급들이 저한테……

○김영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독일 방송과 관련된 내용을 장관께 누락한 겁니까, 보고에서? 모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누락한 게 아니라 3월 4일 날 대사관이 본부에서 처음으로 연락을 받고, 이러이런 게 있으니 알아봐라라는 연락을 받고 알아보고 모니터한 결과를 보고한 게 이틀 정도 주고받은 게 있는 걸로……

○김영배 위원 며칠날 보고받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3월 4일하고 6일 사이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아까 모르셨다는 것은 틀린 말이네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제가……

○김영배 위원 3월 6일 날 인지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한테, 3월 7일 날 알았다니까요.

○김영배 위원 이 영상이 삭제된 게 3월 8일입니다. 그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3월 4일 날 방송되고 나서요 교민 사회하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민들도 인터넷이나 그 방송사에 항의를 하고 메일을 보내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 그 방송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KBS가 질의한 피닉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피닉스의 저널리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국 판단이 돼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즉 그 방송사도 이 방송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장관께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장관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와 대한민국의 공관은 여기에 대해서 하등 한마디도 안 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외교부가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아까 김건희 여사 잠깐만 올려 보세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저기에 외교부가 지금 사기꾼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거짓말도 했고 자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썼다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게 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저게 다 사기꾼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게 팩트도 포함돼 있다고요.

그런데 왜 유독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저렇게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근본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야당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석학들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책에 보면 민주국가가 무너지는 핵심 중의 하나가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야당을 저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있는 저런 방송이 버젓이 방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공화국의 국무위원이 어떻게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뭐라 하셨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좌우에 다 있다고 저희는……

○김영배 위원 아니,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보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뒤에까지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달라 이 말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보도를 봤을 때 이미 상황이 끝났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비판한 보도를 처음으로……

○김영배 위원 아니, 6일 날 보고받으셨다는데 8일 날 삭제가 됐는데 어떻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저는 6일이 아니라 파리시간으로 3월 7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3월 8일일 겁니다.

○김영배 위원 아까 6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 볼까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6일 날 내렸다는 것이고요. 저는 파리의 시간이 3월 7일이니까 서울시간으로 3월 8일입니다.

○김영배 위원 다시 하겠습니까만 국장들이 보고한 것 중에 아까 장관이 말씀하신 보고받은 그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을 밝히면 밝힐수록 외교부와 저한테 대한 그 비판하신 보도 자료의 부당성이 더 커질 뿐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건 위원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 그 내용들이 독일 공영방송의 내용이면, 독일 공영방송이 그렇게 얘기한 거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프로를 봤을 때 그 모든 내용들은 취재를 한 겁니다. 취재하는 사람들이 한 내용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12345’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사 입장이 아니고 방송사가, 언론사가 취재한 것을 내보내는데,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국제질서에 큰 변동이 있을 거다 다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홍기원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 보면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배제하고 유럽도 배제하고 또 미국이 그렇게 많은 돈·무기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다가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가 푸틴하고 통화하고 또 종전과 관련한 협상에서 러시아에 가장 유리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푸틴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됐었는데 오히려 트럼프는 푸틴과 러시아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잖아요. 또 파리기후변화협약, 1기 때처럼 다 탈퇴했고 또 심지어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탈퇴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마디로 말해서 동맹으로 생각했던 EU나 NATO 또는 자기들이, 미국이 전적으로 지원했던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적대시하고 러시아와 그런 태도 취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 가장 가깝고 오랜 우방이었던 캐나다에 하는 그런 정책이나 태도를 봐도 그렇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후 제일 먼저 갔던 국제회의가 뭘지 기억하세요? NATO 정상회의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홍기원 위원 스페인에서 있었던 NATO 정상회의는 NATO가 중국을 새로운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회의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앞장섰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NATO를 오히려 저렇게 멀리하고 그럼으로써 유럽이 중국과 다시 가까워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국제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또 동맹이니 또는 가치 공유니 이런 게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관님은 지난번에도 기존 윤석열 정권의 그런 외교·안보 노선 유지하면서 어찌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든지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가치 무시하고 동맹 무시하고 또 러시아하고 우리가 굉장히 적대적 태도를 취해 왔었는데 오히려 미국은 러시아하고 더 가까워지고 등등……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저는 문제만 제기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적응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졌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기조를 다 바꾸려면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기조에 맞춰서 다 바뀌야 될 텐데, 유럽도 그런 데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또 인태 지역의 우리와 같은 유사 입장을

가진 나라들도 같은 고민을 갖고 있고, 제가 이번에 출장을 나가서 만난 모든 주요 국가들의 외교장관들이 다 저희와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되겠지만 그 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그냥 무조건 지금까지 하던 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기조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또 조율할 것은 조율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면 많은 조정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그것은 당연하지요.

○**홍기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특사단을 꾸려서 EU와 영국 등을 방문했을 때 해당 국가에서도 상당히 여러 우려와 걱정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 왔던 자유무역과 관련된 기조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는 좀 더 긴밀하고 적절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한정애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독일 공영방송 관련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방송국에서 이것은 편파적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방송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1시간 내내 방송을 하는데 이게 방송에서 방송의 앵커 목소리를 통해서 방영한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주장을 실었다라고 하지만 그 주장만으로 쭉 나열된 것은 결국 옳지 않은 방송이지요, 왜냐하면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내용 중에 보면 국회의원 중의 절반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그 뒤에는 중국이 있고 북한 해커가 있어서 우리 선거시스템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부정선거와 관련한 것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아예 배척이 되었다라든지 하는 아주 클리어한 메시지가 같이 진행된다면 이런 문제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장관께서 지난번 계엄이 났을 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계엄에 반대했던 이유가 외교적 파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민주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직접·자유·비밀이 보장되는 투표 체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당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마치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절반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한 것이 버젓이 방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재독 공관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장관께 보고가 언제 됐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해당 공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공관이 파악한 게 너무 늦게 파악됐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내려간 사이, 하루이틀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린 겁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국회에 낸 답변은 국내적 정치 상황에 대해서 공관이 이래저래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했었으면 저희가 오히려 될 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핑계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회에 낸 답변에는 그런 답변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파악이 늦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대로 조치했을 텐데 파악이 늦어서 적절한 조치가 늦었습니다’가 아니라 ‘국내적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많은 소견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이 부정되고 있고 그것이 타국의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방영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한민국 공관이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대한민국 시스템을 부정하는 방송이 공영방송에서 버젓하게 방영이 되고 있는 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제대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저는 며칠 전에 있었던 ‘북한 핵잠수함 건조’, 그렇게들 보도를 하지요.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건조 중인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도를 했고, 어제 3월 10일 날 단거리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기획이라고 읽혀지는데요.

우선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019년에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쏘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께서 전혀 실망하거나 화가 나지 않고 단거리미사일이고 매우 일반적이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투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단거리미사일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다, 특별한 게 아니더라

는 걸 과시하고 싶은 면도 있고 우리나라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서로가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는데, 불협화음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 싶고.

그런가 하면 일명 자기들 말대로 핵동력유도탄잠수함이라는데 자기들이 핵 능력의 또 다른 축을 조만간 가질 수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미,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된 거는 어쨌든 간에 한미가, 우리 합참도 그렇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동시에 단거리미사일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낸 건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한미가 협조가 잘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이 생각했던 결과는 아니고 북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한미가 이런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히 또 같은 원 보이스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인을 준 거기 때문에 좋은데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자기들 말대로 핵동력유도탄잠수함 건조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1만 이삼천 명 보내 가지고 한 3분의 1이 사상자가 나고 한 사람당 2500불에서 한 1억 달러 벌이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의 환율이 1달러에 북한 원화 8000 하던 게 지금 2만 2000 원화가 돼 있거든요, 쌀값도 많이 올라 있고.

김정은 위원장 자기 말대로 쌀밥에 고깃국 먹이겠다고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북한 주민들이 갈수록 곤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이 죽어 가면서까지 지금 루블화인지 달러인지 1억 달러를 벌었는데 이걸 온통 지금 이런 공격용 무기, 민족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 재원을 넣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가 왜 아무런 멘트를 하지 않는가가 일단 제가 좀 궁금해서 외교부장관께서 혹시 한미 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협의를 좀 하신 게 있으면 그리고 협의한 게 없으시면 왜 아무런 멘트를 안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 경험으로는 그 멘트는 북한인권 문제 얘기할 때 주로 쓰는 저희들의 주장이었고 핵미사일 발사할 때는 별로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걸 안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했습니다.

권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철승 위원 권철승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저희 방에서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니깐 외교부에서 안 주셔서 그냥 여쭙보겠습니다. 작년 정도부터 최근까지 혹시 베트남 공관에서 자체 징계를 했거나 징계 요청을 했거나 등등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직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혹시 나오셨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부감사관 **임동혁**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있습니까?

○외교부감사관 임동혁 예.

○권철승 위원 그러면 왜 없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외교부에서?

○외교부장관 조태열 공개하기가 어렵다라고 답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후 좀 더 자료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게 감사보고서라면 아마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철승 위원 감사보고서도 다 제출을 합니다. 감사보고서라고 제출 안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한 번도 감사보고서 제출했다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도 다 제출하잖아요.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러면서. ‘그런 적 없다’ 했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선화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이 문제가 남북 간에 상당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은 분명한데 통일부장관으로서 국방부의 이런 행동이 남북 간의 관계를 해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주의를 주거나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제가 딱히……

○권철승 위원 없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권철승 위원 그러시면 안 돼요. 정부 내부에 보시면요 산업 진흥을 하는 부처 산업부나 중기부 같은 데서 막 하면 환경부나 노동부 이런 데서 그 문제점들이나 부작용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규제도 만들고 하잖아요. 이게 남북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한데 통일부장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런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위원회에서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실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권철승 위원 하셔야 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거.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북한이 이번 3월 달에 안전으로 올린다고 들었거든요. 안전으로 올렸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거 정치적인 토론의 장으로 만들려는 악의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응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철승 위원 아니, 이게 사실상 국방부에서 인정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만 대응을 해

서 대응이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미국 등하고 저희 동맹 우방국하고 같이 공조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아니, 공조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상 인정을 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조하겠다, 그냥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응을 마련하셔야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앞의 질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잡힌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이 사람들이 전쟁 포로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유용원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전쟁 포로 신분으로 우리 쪽에 귀순한 사례가 있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귀순 그게, 전쟁 포로의 신분 얘기가 제가 실무자였을 때 동해에 잠수함 침투했을 때 북한군 몇 명이 민간 복장 입고 상륙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그게 전쟁 포로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던 케이스는 제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만. 북한이 전쟁에 참여한 게 처음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전이?

○유용원 위원 예, 그렇지요. 해외 파병을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대규모로 한 것은 처음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겠지요.

○유용원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통할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을까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글썄요, 좀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우선 북한이 전쟁 당사자로 참여한 게 아니라 러시아군의 일부로 참여했다는 게 특수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전쟁 당사자 자격이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나 전장에서 생포된 건 또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법적인 스테이트, 지위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용원 위원 제가 이번에 두 사람 다 만나봤는데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한 사람은 26살, 한 사람은 20살, 제 아들뻘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안 되고 언어도 안 통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연민의 정도 느껴지고 또 북한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팽개쳐진 이러한 존재가 된 건데요. 그래서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도 좀 생겼는데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환이 좀 시급하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까지는 한 사람은 꼭 가고 싶다, 우리 쪽 오고 싶다는 의사가 거의 100%였고 한 사람은 좀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마음을 굳힐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미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한 사람이라도 먼저 송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간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라는 기본 원칙 그리고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한 사람만 따로 취급할지 아니면 같이 하게 될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락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독일 방송에 나온 걸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방송 스스로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걸 내렸기 때문에 일단락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해서 한번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 보고 우리 서로가 냉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독일 방송이 ‘여당 의원 대다수가 미국 해커의 개입으로 부정선거로 당선 되었다’ 이런 말을 했으면 현지 대사관이나 외교부가 지금처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역지사지해서 문제를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유창호 부대변인이 지난번의 PG 건 때문에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직 회부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성락 위원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위성락 위원 장관께서는 유 부대변인으로부터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없습니다.

○위성락 위원 혹시 또 이 건으로 무슨 청탁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없습니다.

○위성락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외교부 조직 운영이 공정하냐,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되고 많은 직원들이나 언론이나 국회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공명정대한 처리가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그런 음모론에 따르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리스트 중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짧은 기간 안에 해외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유엔 기구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물을 때 제가 농담 삼아 ‘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정 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같

이 하하호호 웃어요. 그 정도로 희화화된 얘기에요. 그런 이야기가 국격을 실추시킬까 봐 그런 거예요. 특정 정당을 옹호하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는 게 민망한 요즘입니다.

내일부터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 예고돼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사례, 특히 국방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부담을 2배로 올리고 그리고 투자를 1조 달러까지 하고 등등 다소 예상 못 했던 방식의 여러 가지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그런 협상이 이루어진 거 발표도 하고 또 대만 같은 경우도 TSMC가 2나노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서 1000억 달러 이상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도 사실은 대만이 안보를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양보를 한 거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부처 간의 칸막이나 분절화를 통해서, 우리가 ODA 얘기할 때 분절화하는데 이런 협상이야말로 굉장히 다면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정보가 취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 리더십이 있다면 그 안에서 통합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대행 체제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총괄해 내고 톱다운 방식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종합될 필요가 있고 또 각 부처의 역할에 맞춰서 취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일본의 이런 협상 과정의 이야기를 어쨌든 간에 외교부 관계자들이 외교 현장에서 역할을 굉장히 한 것들이 있으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대만의 이런 TSMC 투자와 관련된 그 막후의 여러 안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트럼프 정부와 논의되는 그 이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조태열** 다 정보 수집하고 있고 그것을 관계부처와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보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지금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관련 부처 장관과의 협의회가 아주 긴밀하게 조율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정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취합을 해 보니까 정말 일본이든 아니면 대만이든 미국이든 각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의 분들까지도 경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해 보지요. 외교부에서 현재 이 자리에서 노출하지 못하더라도 위원님들께 상의할 수 있는 정도의 오픈 마인드로는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지금 관세라고 하지만 관세청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에 국토교통부와 유사한 청의 방식으로 존재했던 것을 결국은 국세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세청을 인터널(internal)이라고 한다면 관세를 관세청이 아니라 엑스터널(external)이라고 해서 아예 그게 수입인 것처럼 명명하고 있는 것부터 철학이 느껴지거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것 같다, 국내의 물가를 올리면서 그리고 노동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향후의 대책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단 외교부만이 아니라 미국과 관련해서 산업과 관련된 부처 등등 여러 가지 정부들

이 취합될 필요가 있고 그런 관련된 내용들 가운데 예민하게 수집된 정보가 있다면 국회와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외교부장관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에 배타적인 선진국들에 맞서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걸 이겨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등 국제적 갈등 상황에서 독자적 입장을 취하면서 지금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향후 올림픽을 유치하거나 ICJ 재판관을 배출하거나 뭘 하려고 그래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중개 무역지, 네덜란드, 홍콩 뭐 이런 데 수출하는 것 상당 부분이 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로 재수출해서 통계에 안 잡히더라도 우리의 큰 고객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근무할 때 보면 길거리에 한국 차들이 너무 넘쳐 나가지고요 ‘이 차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나?’ 이렇게 하니깐, 우리 중고차도 있고 우리가 유럽에 수출했던 차들이 중고차로 다시 팔려 오고 결국은 다 우리의 중요한 커스터머(customer)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사실 중요한데……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에 뭔가 새로 대응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로벌 사우스 외교 전략 세미나를 최근에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다. 하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대전략 이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각 지역과 국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동시에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둘을 아주 균형 있게 추진해 가야 의미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게 물론 언론의 큰 관심을 못 받을지라도 우리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 결과가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두 가지 포인트, 글로벌 사우스 외교 전략의 두 가지 측면을 가장 잘 나타낸 게 작년에 6월에 있었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상대로 한 상당히 전략적인 우리의 어프로치(approach)를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평가를 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참가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 테일러드(tailored)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것이 다른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대하는 것과 굉장히 차별화된다는 하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저한테만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총리께 다 정상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성공적인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외교성과 중의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조 속에서 앞으로도 글로벌 사우스를 대할 생각이구요.

아까 김태호 위원님께서 ODA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럽이 재무장하면서 다들

ODA를 줄여 가는데 한국의 기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유럽이 지금 안보를 방위력을 향상하자, 재원이 없으니까 ODA를 줄여서 그걸 방위력 행사하는 데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차원에서의 개발협력자금이 완전히 동결 내지는 줄어드는 상황이 돼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의 기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데 우리도 ‘유럽같이 줄이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아서 ‘아직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ODA를 잘 활용하면 글로벌 사우스에서 선진국과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장관님, 작년에 외교부 전략기획과에서 해외외교 독립운동 관련 조사 및 연구라고 하는 용역을 발주한 게 있거든요. 내용은 좀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압니다.

○김영배 위원 그게 작년에 대통령이 3·1절 연설을 하고 나서 후속으로 지금 발주가 됐다 이렇게 실무자가 얘기했다는데 맞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3·1절 때 대통령께서 무장독립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의 외교독립운동, 문화운동 그런 여러 가지 것까지 다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특별히 독립운동 중에서도 외교독립운동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한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요 이 내용 중에 보면 중국 내에서 한국 독립운동이 굉장히 침체가 돼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 운동을 했다, 그중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을 동원하려고 동원 대상으로 하려고 도와줬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반면에 이승만이라는 이름은요 5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중에 723번 나오는데 나머지 외교독립운동을 했던 신채호, 안창호…… 아주 훌륭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조소앙, 다 합쳐서 525번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연설한 것까지 저렇게 목록을 짚 해 가지고…… 초등학교생한테 무슨 쪽지를 받았다는 것까지 넣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발주가 된, 그래서 맡은 연구진이 다 친일 내지는 아니면 뉴라이트 내지는, 확실한 건 9명 중 6명이 이승만연구원 관련이거나 이승만 전공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 용역이 이승만을 맞춤형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3·1절 기념사 이후에 외교독립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이승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진행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김명섭 연구책임자가 이승만연구원장 출신이고요. 그 교수들 다 보세요. 이승만연구원 출신, 이승만기념재단 출신, 이승만 연구 수행을 다수 했고 우남이

승만장학금을 수상했다는 의혹도 있고, 이런 분들이 했거든요. 이 내용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압니다. 저 내용을 정확히 다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용역을 발주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초반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외교부가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친일 혹은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향성 왜곡, 뉴라이트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전략기획과에서 편파적으로, 그것도 사실을 저렇게 왜곡해 가면서 하는 게 저는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인 활동이 압도적이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중남미까지 다 확장해서 용역 사업을 발주할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균형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만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추가로 한 분만……

김영배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3분입니다.

○**김영배 위원** 저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김석기** 예, 혼자……

○**김영배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겠는데요. 거기 보면 최근에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당하는 사례가 23년 전에 16명이었는데 작년 8월 달, 8개월 만에 105명이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SBS에 나온 게 뭐냐면 캄보디아에 간 청년이, 이게 불체자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으로 오고 싶은데 공관에 이야기를 못 하는, 법적 신분이든 여러 사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격하게 이런 사례가 지금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캄보디아의 특성상 캄보디아 정부하고 굉장히 공조가 돼야만 일단 교민 보호가 가능한 일차적 조건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나머지 불체자나 여러 조건들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민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고 이런 경우에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교민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움은 아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지난번에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보니까 필리핀 현지 교민 1명이 현장에서 강도를 당해 가지고 총을 맞고 사망을 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민 보호를 위해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뭐 아시는지 혹은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 한번……

○**외교부장관 조태열** 작년 10월에 대사관 증원을 1명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기 취업 사례가 뭔가, 유혹의 강도가 높아지고 금전적인 혜택이 커지니까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이 없

는 한 앞으로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증원된 1명이 예방 또 피해 대책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1000만 명이 넘게 본 영화 중에 하나 보면, 거기 보면 교민 보호 혹은 범인 잡으려고 국내에서 건너간 형사들이 그냥 막 활약하는 이런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경찰에는 혹은 우리나라 대사관에는 해 봤자 소용도 없고 주먹 쥔 사람이 그냥 우리를 보호해야 돼 이런 식의 인식을 반영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게 적극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대책을 같이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여쭙본 거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윤봉길 이 문제는, 이승만 이 문제는 그냥 이승만 대통령을 차라리 독립적으로 이승만 이름을 붙여서 용역을 하시고요. 같은 데 다른 분들을 저렇게 찌그러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런 방식은 저는 정정당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외교부라고 하는 정부 부처가 저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관리 감독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연구자의 독립성도 더 존중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외교부장관님, 방금 김영배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그 정책연구 관련한 문장 취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점은 제외하고 내용을 그냥 조금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PT 보시면 위의 것이 외교부에서 낸 이번 문서이고요. 밑의 것이 논문인데 이게 똑같습니다. 그다음 그 밑의 거 보시면 쪽 가서 ‘군사훈련과 상통했다’인데 이거를 ‘군사훈련과 상통하는 바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단어만 살짝 바꾼 거지요.

다음 페이지요.

‘대한인이라는 호명’은 어찌고저찌고인데 ‘조선과 한국이라는 호명’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냥 말을 조금씩 바꿨지요.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95라고 쓰여 있는 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약 20만 명까지 팽창했던’ 이게 밑에 보면 ‘약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던’, 말만 살짝살짝 바꾼 거지요.

다음 페이지요.

이거 보시면 ‘청국’이라고 돼 있는 걸 ‘중국인’이라고 바꿨어요. ‘대한인’이라고 이민 이

렇게 된 거지요. 하와이에 사는 한국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하와이 한인’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앞에서 언급한 사람 실명을 썼고 차이가 전혀 없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리를 다 못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지시를 한번 내리십시오. 내용상의 이런 부실함이나, 의도는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치하고 내용상의 부실함에 대해서도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들어다보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한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강인선 차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 전체회의 때 해외출장 중이셔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저희가 12월 달에 전체회의를 할 때 12:3 계엄이 나고 골드버그 대사하고 12월 4일 날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에 소통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2:3 계엄이 있고 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소통을 한번 하셨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한정애 위원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후에 외교와 대외관계에 있어서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어떤 면에서 달라지는 점이 없을 거라는 거지요? 계엄이 나서……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지요.

○한정애 위원 계엄 해제되지 않고 계엄 상황에 있어도……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계엄 이후에도 달라지지……

○한정애 위원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게……

○한정애 위원 미국이 그것을, 골드버그 대사가 그것을 엑셉트(accept)하시던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엑셉트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골드버그 대사…… 외교적인 소통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이후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을 감안하시면 골드버그 대사가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그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를 한 내용은 용산이나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왜 12월 달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그 기록을 다시 보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는 간부회의 이후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간부회의는 아니었고 저희들이 모여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물었기 때

문에 그것에 대답하셨습니다.

○**한정애 위원** 간부회의 이후에 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소통이 있었냐고 그랬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위원님하고 장관님하고 얘기를 하였고 그 이후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한정애 위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대목만 떼 가지고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죽 질의를 한 내용은 계엄이 선포되고 미국과 소통했느냐. 그날 위원님들 대부분의 질의가 계엄이 선포되고 미국과 소통했느냐, 저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질의를 하였고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소통 안 했다고 했고 4일 날 아침에 계엄이 해제되고 소통했다고 하셨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맥락에서는 그 회의가 끝난 이후의 소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정애 위원** 대한민국 공직자가 이렇게밖에 일을 못 한다면 참 답답하네요.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본인은 여기서 부끄러워하면 본인의 존재 가치가, 존재 이유가 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그 당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피해 나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교부 및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김영호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 ○출석 위원(19인)

권칠승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석기 김영배 김태호 안철수 위성락 유용원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정 인요한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 ○청가 위원(2인)

김준형 이재명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조태열

제1차관 김홍균

제2차관 강인선

기획조정실장 배종인

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기획실장 김지준

감사관 임동혁

조정기획관 문인석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

북미국장 홍지표

유럽국장 임형태

영사안전국장 윤주석

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국제경제국장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진동

한반도정책국장 이준일

언론담당관 김용환

유네스코협력TF팀장 하위영

한국국제협력단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획협력이사 이종국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영채

통일부

장관 김영호

차관 김수경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정보분석국장 홍진석

통일협력국장 황태희

남북관계관리단

단장 소봉석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고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태영호  
 사무차장 동승철  
 자문건의국장 박학민  
 위원지원국장 송순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무총장 이주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정낙근  
 경영기획본부장 이병도  
 재외동포청  
 청장 이상덕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  
 교류협력국장 김민철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김영근  
 경영기획실장 이미경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4)

2월 26일 회부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6.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6.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7)

이상 2건 2월 27일 회부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6)

2월 28일 회부됨

#####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4.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1)

3월 5일 회부됨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5.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1)

3월 6일 회부됨

####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대통령령 제35292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 2. 25.	2025. 2. 25.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외교부령 제14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2. 25.	2025. 2. 25.
외교부령 제145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2025. 2. 27.	2025. 2. 27.
외교부훈령 제238호	자율기구 “국제인공지능외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5. 2. 25.	2025. 2. 25.
외교부예규 제282호	「2025년 외교부 성과급 지급 지침」	2025. 2. 26.	2025. 2. 26.
외교부공고 제2025-40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 3. 7.	2025. 3. 7.
외교부예규 제283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2025. 3. 10.	2025. 3. 10.
통일부령 제13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2. 25.	2025. 2. 25.